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19
----------	-------

발의연월일 : 2021. 6. 23.

발 의 자 : 권명호 · 유상범 · 엄태영
김도읍 · 송언석 · 이만희
최춘식 · 최형두 · 강기윤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되, 그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그런데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취소 사유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고, 지정 취소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를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으로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호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u> 3. <u>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4.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p><u><신 설></u></p> <p>⑥ 제1항에 따른 <u>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u>,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⑧ (생략)</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⑦ 보호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⑧ -----<u>평가기관의 지정기준</u>----- ----- ----- -.</p> <p>⑨·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p>
---	---